

EU Brief

| 월간 EU 동향 |

- 유럽발 재정위기 중간 점검
Interim analysis on European fiscal crisis
- EU-일본 참다랑어 분쟁
EU and Japan clash over trade in bluefin tuna
- EU 통합에서 배우는 아세안의 경제통합
What ASEAN can learn from EU's economic integration
- EU 기업들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
Recent performance of EU's most valuable brands
- EU 경쟁법상 사전청문제도
Pre-hearing procedures on competition law in EU

YONSEI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EU Focus 그리스 지원방안에 합의한 EU 정상회의 002
	EU Economy 유럽발 재정위기 중간 점검 003 Interim analysis on European fiscal crisis
	EU Politics EU-일본 참다랑어 분쟁 007 EU and Japan clash over trade in bluefin tuna
	Trade Issues EU 통합에서 배우는 아세안의 경제통합 011 What ASEAN can learn from EU's economic integration
	Industry Trends EU 기업들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 015 Recent performance of EU's most valuable brands
	EU Law EU 경쟁법상 사전청문제도 020 Pre-hearing procedures on competition law in EU
	Social Issues EU 스포츠 정책의 과거와 현재 024 Past and current EU sports policies
	Report Review 유로화 도입 10년은 성공적으로 평가되나 만병통치약은 아님 027 Eurozone faces a challenge of regional imbalance after successful first decade
	EU Centre news 제1회 비즈니스 심포지엄 029 The 1 st Business Symposium 국제학술회의 030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Lisbon Treaty 기후변화 국제세미나 031 EU-Korea Seminar on Priorities for a Post 2012 Agreement 제10회 특별강연: 유럽 장학 설명회 032 The 10 th EU Special Lecture: Introduction to European Scholarships 제6회 EU Core Circle Society 세미나 032 The 6 th EU Core Circle Society Seminar

그리스 지원방안에 합의한 EU 정상회의

지난 3월 25~26일 이틀에 걸쳐 EU 정상회의(유럽이사회)가 개최되었다. EU의 그리스 지원 여부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국 정상들은 그리스 지원방안에 합의하였다. 합의안에 따르면, 그리스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로지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그리스 지원에 IMF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리스 문제를 유로지역이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유럽해법’을 주장하였다. 현재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도 이 방안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EU 27개국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은 IMF의 참여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스웨덴과 핀란드, 오스트리아도 IMF의 참여를 희망하였다. 이렇게 각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상회의 개막 전날까지도 그리스 지원방안과 관련된 초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하지만 EU 정상회의 개막 직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시간에 걸친 토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합의한 초안을 유로지역 정상들이 그대로 채택하였다. 이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지는 주장했던 프랑스가 양보한 것으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지원안이 꼭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합의안은 국제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그리스가 합리적 수준의 이자로 돈을 빌리고, 엄격한 긴축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친다. 이번 지원방안은 당장 그리스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가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대기성 차관에 합의

한 것이다.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고금리로라도 그리스가 국제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 유로지역과 IMF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만약 그리스가 지원요청을 하고 EU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기댈 수 없다고 판단하면, 16개 유로지역 국가의 만장일치 찬성을 조건으로 금융 지원방안이 가동된다. 이때 유로지역은 지원 금액의 3분의 2를 부담하고 IMF가 나머지 3분의 1을 맡게 된다. 이러한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지원안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리스의 국가부도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EU 정상들은 그리스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 외에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EU의 2020전략’의 주요 사안도 합의하였다. ‘2020전략’은 탄탄한 경제 기반 위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궁극적 목표로 사회적 결속의 흔들림 없이 ‘EU의 경쟁력과 생산성 끌어올리기’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합의된 5가지 주요 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빈곤 감소, 둘째, 노동인구의 75% 이상 취업률 달성, 셋째, EU의 기후·에너지 목표 달성(CO₂ 방출 감소, 재생에너지 소비 증가,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 넷째, 학교 중퇴율 감소와 고등교육의 증가, 다섯째, EU GDP 3%의 연구와 혁신에 대한 투자이다. 합의된 주요 목표는 회원국 각각의 국가목표로 전환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정상들은 6월 토론토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 EU의 우선과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EU 회원국들이 앞으로 강한 결속력과 정치적 의지를 발휘해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유럽發 재정위기 중간 점검

Interim analysis on European fiscal crisi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tumbled in the first few months of 2010 reflecting investors' concerns over Greece's fiscal position. Greece's fiscal deficit for 2009 was 12.7% of GDP and its government debt stood at around 125% of GDP. Markets were calmed, yet only briefly, as Greece was able to raise 5 billion euros through a bond issue and also as a deal was reached between Eurozone nations to grant co-ordinated bilateral loans. Uncertainties still persist because the agreement included no numbers specifying the size of the package and how much each country would contribute. Also, it requires the unanimous agreement of Eurozone nations to release their loans. The EU's future international stature will depend on how Eurozone's fundamental problems will be solved in the coming years.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은 유럽發 재정위기

2010년 초,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는 국제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만들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 공한 그리스는 재정적자가 GDP의 12.7%에 이르고 정부부채도 125%에 육박한다. 이는 EU의 기준인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재정적자 3%, 정부부채 60%를 훌쩍 뛰어 넘는 수치이다. 포르투갈 역시 재정적자가 9.3%, 정부부채가 85%에 이르고 있다. 스페인은 두 국가보다 재정상황이 양호하지만,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고 부동산 시장 및 관광산업 침체로 인해 민간소비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포르투갈, 스페인 등 다른 유로지역의 국가들로 확산되고 최악의 상황에는 유로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그리스 국제 발행의 성공(50억 유로 규모), EU 및 주요 회원국들의 그리스 지원 원칙 합의 등으로 인해 소강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사태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만약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EU 차원의 지원은 여러 방법이 존재하는데, EU집행위의 그리스 정부채 보증, 집행위의 채권 발행, EU 펀드 조성,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한 지원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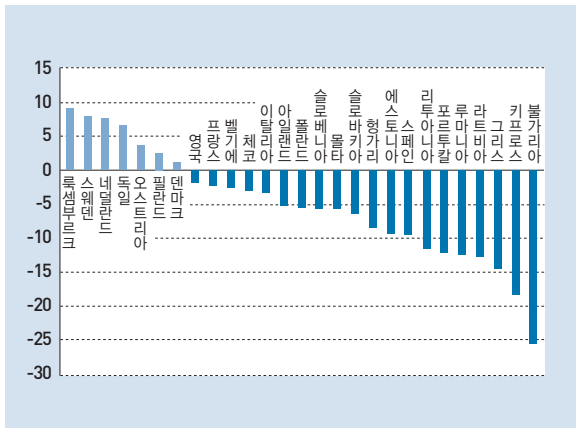
하지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언제든 위기설은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유럽發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 확산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유로지역 내 불균형 누적은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EU에서도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다. 그리스의 GDP는 EU 전체 GDP의 1.9%, 포르투갈은 1.3%에 불과하다. 디폴트 위기가 임박했다 하더라도 그리스 구제에 필요한 자금이 250억 달러면 충분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또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보다 신용 시장에서의 상황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리스의 5년 만기 CDS는 4.4% 수준이고, 신용등급도 BBB+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포르투갈은 A+였고, 스페인은 AA+였다. 이는 한국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것이며, 당장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수준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시장은 심하게 동요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규모가 작은 남유럽 국가들이 국제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EU가 이번 사태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감 때문이다. 즉, 위기 이면에는 유로화를 쓰는 16개국이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 유로지역 GDP 대비 경상수지(2010년) (GDP대비, %)



자료: Eurostat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져 유로지역과 유로화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불신감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특히 그리스는 방만한 공공부문 운용으로 금융위기 훨씬 이전부터 정부지출이 확대된 상태였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둘러싸고 회원국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즉, 경제적 이슈가 EU의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정치적 이슈로 확대된 ‘정치적 위기’였다.

또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남유럽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이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 유로지역 시스템 자체에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경제력 및 산업경쟁력이 약한 남유럽 국가들이 유로 지역에 편입되자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었다. 여기서 환율은 유로로 통일되어 있고, 통화정책은 ECB가 결정하기 때문에 자국 경제의 불균형이 생길 때 제시할 수 있는 해법이 재정정책 외에는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든든한 사회보장제도가 사회 안정의 바탕인 유럽이 실업급여, 연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면 사회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결국 재정이 늘 골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EU-IMF 공동지원안을 통해 그리스 사태 해법을 모색
근본 원인이 유로지역 시스템 자체에 있었던 만큼 재

정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열쇠는 유로지역 내 주요 국가들이 쥐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를 지원함으로써 얻게 될 국내외적인 부담과 반대 여론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적으로는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자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며, 외적으로는 유로지역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 독일과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로지역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 두 국가의 그리스에 대한 위험노출액(그리스 정부채권, 기업부채, 개인대출 등)이 약 1,190억 달러에 달해 그리스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에 대한 위험노출액까지 모두 합치면 무려 9,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유럽 전체 은행들의 PIGS에 대한 위험노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서 코메르츠뱅크, BNP파리바 등 독일과 프랑스의 은행들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지던 한 달간 가파른 주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며, CDS 역시 지난달 이후 꾸준한 상승세에 있다. 그리스가 만약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된다면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이 떠안은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이 다시 서유럽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를 지원함으로써 겪게 될 손해보다는 지원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입장이 EU-IMF 공동지원이라는 절충안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EU 정상회의(2010년 3월 25일~26일)에서 정상들은 유로지역과 그리스 간의 쌍무적 차관 공여와 IMF 자금 지원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발표 이후 시장은 즉각 반응하였는데, 대부분 유럽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리스 국채 금리는 하락했으며, 유로화는 아시아장에서 강세로 전환되기도 했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가능성 점검

그리스 재정위기는 EU-IMF 공동지원안으로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재정위기가 대두된다면 그 충격은 그리스 사태와는 비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서유럽 주요국들의 상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① 스페인

최근 스페인 정부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스페인의 내수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 문제다. 스페인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3.6%였으며, 2010년에도 -0.8%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또한 실업률은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버블의 후유증, 대외 채무 등의 부담에 직면해 있다. 특히 스페인 세수의 절반이 부동산과 내수에서 나오는 만큼 현재 해당 부분의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정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스페인 경제가 우려되는 이유는 유로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때문이다. 스페인은 EU GDP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스나 포르투갈이 2%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규모가 그리스나 포르투갈의 약 4배 정도 큰 것이다. 그런 만큼 스페인에서 문제가 불거질 경우 그리스나 포르투갈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BNP 파리는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통해 스페인의 재정위기를 일소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경우, 투입 비용이 2,7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리스가 680억 달러, 아일랜드가 470억 달러, 포르투갈이 410억 달러가량이 필요한 데 비해 훨씬 큰 규모이다. 유로지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스페인 정부도 밝혔듯이 스페인은 재정위기 발생 시점까지 흑자예산을 유지해왔으며, 정부부채도 매우 적은 폭으로 늘어났다. 또한 독일·프

랑스 등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이들 국가의 경기가 회복된다면 스페인의 내수 상황을 개선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스페인의 위기는 주변국의 금융불안 및 재정위기가 얼마나 빨리 마무리되느냐, 독일·프랑스 등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한 역내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②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재정적자 규모가 5.3%로 다른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고, 시장불안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다만 정부부채가 과도해 다른 나라에서 재정위기가 부각될 때마다 함께 거론된다. 현재 이탈리아 국채(10년 만기)의 수익률은 독일 국채에 비해 0.96%p가 높은데, 이는 그리스 국채와 독일 국채의 수익률 스프레드(차이)인 3.68%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2008년 말 기준 이탈리아 가계부채는 유로지역 평균인 93%보다 훨씬 낮은 57%에 불과하다.

EU집행위원회의 회원국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비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중간 위험국가’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다른 유로지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상수지 적자 및 경기 침체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자국 통화 가치의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가 없고, 이자율을 낮추거나 화폐 공급을 늘려 경기부양을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이탈리아 또한 향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③ 영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영국의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 그동안 금융부문의 부실을 구제금융을 통해 정부가 떠안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했기 때문에 영국의 정부재정은 그리스와 포르투갈만큼 급속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도 은행부실이 늘어날 경우 추가적인 재정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영국 은

EU-일본 참다랑어 분쟁

EU and Japan clash over trade in bluefin tuna

The European Commission strongly supports a ban on international trade of bluefin tuna. However, a ban on the trade was rejected on March 18th as the member nations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went to vote. In a statement after the vote, Janez Potočnik, the European commissioner for environment, and Maria Damanaki, the European commissioner for fisheries, expressed their disappointment over the failure to adopt EU's proposed plan which would have guaranteed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fishing industry.

CITES회의 참다랑어 무역금지 시도 좌절

지난 3월 13~25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가 진행 중이던 3월 18일에 대서양과 지중해산 참다랑어의 어획 및 수출입을 금지하려던 시도가 찬성 20표와 반대 68표, 기권 30표로 부결되었다. 이로써 세계 최대 참다랑어 소비국(전 세계 참다랑어 소비량의 70~80%를 차지)인 일본은 안도할 수 있게 되었다. 표결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금지안이 통과되는 쪽으로 기울어 언론은 세계 시장에서 참치가격이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

카타르 CITES회의 이전 EU측 결정사항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EU가 대서양 참다랑어의 국제교역 금지를 지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EU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2011년까지 대서양 참다랑어의 국제교역 금지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U집행위원회가 대서양 참다랑어의 국제교역 금지를 제안한 것은 대서양 참다랑어의 남획이 참다랑어 어족자원을 심각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U집행위원회는 대서양 참다랑어의 국제교역 금지안에 대해 회원국과 논의하여 공동안을 도하에서 열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

역에 관한 협약(CITES)' 회의 이전에 채택할 계획이었다.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인 포토치닉(Janez Potočnik)은 "한 생물의 종이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자연자원을 보존할 의무를 갖고 있다. 대서양 참다랑어가 곧 멸종할 것이기에, 우리는 즉시 행동해야 하며 대서양 참다랑어 무역 금지를 제안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EU 해운 및 어업담당 집행위원인 다마나키(Maria Damanaki)는 "우리의 의도는 어업종사자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다랑어 어족자원을 보존해야 한다. 남획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내린 결정은 소규모 어선단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앞에서 언급된 집행위원들의 견해에서 볼 수 있듯이 EU집행위원회는 대서양 참다랑어의 어족자원 감소를 깊이 우려하였고, 이 원인이 참다랑어의 무역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ICCAT와 EU 내에서의 참다랑어 문제 논의

대서양 참치자원 관리를 위해 196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인 '국제 대서양 다랑어 보존 위원회(ICCAT: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가 이 문제를 2006년부터 꾸준히 제기하였다.

행들이 보유한 총 부채 규모는 GDP의 5배를 넘어섰고, 이 중 절반이 넘는 60%가량이 해외 차입금일 정도로 영국은 높은 대외노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시장의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영국은 국제발행의 상당 부분을 외국 투자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영국이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최악의 경우 파운드화를 찍어내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IMF의 지원을 받는 일도 유로지역 국가들에 비해 더 자유롭다. 그러므로 영국정부는 아직 재정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적 금융불안이 있을 때마다 위기설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며, 세금 인상과 재정지출 축소는 향후 수년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도 있다.

★ 2010년 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 현황 (단위: %)

구분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재정수지	-10.1	-5.3	-12.9
정부부채	66.3	116.7	80.3
위협요인	실업률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경쟁력 약화, 경상수지 적자 누적, 정부부채 급증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제시장 수급 불안, 높은 해외의존도 등

자료: Eurostat

첫 시험대를 맞은 EU의 리스본체제

EU는 IMF와 공동지원이라는 방식을 통해 그리스 문제에 대한 시장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 지원금 규모와 국별 분담금 비율이 공개되지 않았고, 유로지역 국가들의 참여 여부도 확실치 않아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유로지역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이번 재정위기를 계기로 고스란히 노출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근본

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즉,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국가들을 하나의 통화와 금융정책으로 묶어놓은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다고 EU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리·감독을 하자니 회원국 주권을 훼손할 수 있어 입장이 난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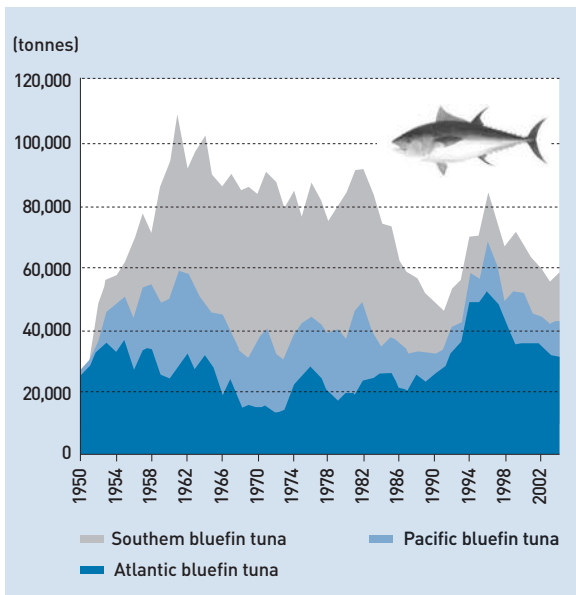
그러므로 이번 위기는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유로지역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가 관건이다. 더 나아가 주요 회원국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및 방식에 따라 향후 EU의 글로벌 위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차후에 EU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회원국들 간에 합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요 회원국까지 재정위기가 불거진다면 새로 출범한 EU의 리더십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유로화와 EU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다. EU의 리스본체제가 시작부터 너무 가혹한 시련을 맞은 셈이다. ★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006년 11월에 개최된 ‘국제 대서양 다랑어 보존 위원회(ICCAT)’ 회의에서 참다랑어 할당량을 2006년 32,000톤에서 25,000톤으로 약 20% 감축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환경보호론자들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할당량 자체가 지나치게 높으며, 할당량을 15,000톤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대서양에서의 참다랑어 어획량이 1990년대까지 15,000톤 정도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남획되어 1996년 56,000톤을 최고치로 어획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EU는 ICCAT의 결정에 맞춰 EU 각료이사회에서 2009년 4월 6일 참다랑어 어족자원 회복안을 채택하였다. 참다랑어 어족자원 회복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EU집행위원회는 특별 관리 및 조사 프로그램(Specific Control and Inspection Programme)을 만들었다. 이는 EU집행위원회, EU 어업관리기구(CFCA: the Community Fisheries Control Agency) 그리고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 참다랑어 어획량



자료: 이은화, 대서양 참다랑어 자원관리 동향, 지구촌 해양수산: 수산·환경, 제 356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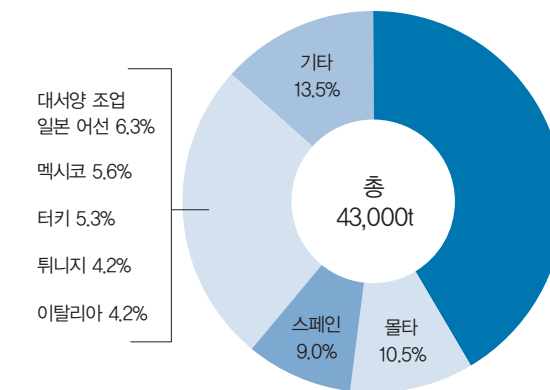
이에 앞서 2009년 4월 1일 EU 어업관리기구는 지중해와 동대서양에서 참다랑어 관련 공동 추진계획(Joint Deployment Plan)을 채택하였다. 추진계획에는 참다랑어 어업과 관련된 모든 단계(시장유통, 해상 및 해안 검사업무, 양식장 등)가 포함된다. 특히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해, 해당 분야 어업에 관계된 7개국(키프로스,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몰타, 포르투갈, 스페인)의 장비를 활용되도록 하였다. 추진 계획에 명시된 참여대상은 EU집행위원회, CFCA, 그리고 EU 회원국들이다. CFCA는 공동 조사 및 감독 업무를 관리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12개의 해상 순시선과 12개의 항공기가 관련 작업에 투입되었고, 274일간의 해상감시 업무와 242일간의 기상감시 업무 그리고 70일간의 항공감시 업무가 계획되었다. 또한 EU 회원국에서 총원한 279개의 감시팀이 참여하게 되었다.

모나코의 참다랑어 무역규제 초안과 EU 반응

참다랑어 무역 규제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2009년 7월 모나코는 ‘CITES 협약’에 참다랑어를 멸종위기의 생물로 등재시켜서 참다랑어의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초안을 발표하였다. 모나코의 주장에 따르면, 지중해에서 다랑어의 개체 수가 1957년에서 2007년까지 74% 감소하였고, 서부 대서양 지역에서는 1957년에서 2007년까지 83% 감소하였다. 또한 2022년까지 다랑어 무역을 전면 금지해도 해당 지역에서 다랑어 개체 수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EU집행위원회는 2009년 9월 9일 참다랑어 무역의 일시 금지를 주장한 모나코의 제안에 지지를 표명하였고, 이를 회원국에게 권고하였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도 모나코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9월 22일 EU 회원국들은 EU집행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지중해에 근접한 EU 회원국은 참다랑어의 무역에 관한 모든 금지조항에 반대할 의향을 나타냈다. 또한 참다랑어 무역금지에 찬

★ 일본이 2008년 소비한 참다랑어의 공급원 (단위: %)



자료: “단 식탁을 사수하라 참다랑어 수입금지 비상.” (2010년 3월 9일), 『조선일보』

성한 사르코지 대통령과 달리 프랑스 정부도 참다랑어 무역 금지안에 반대하였다. 몰타, 키프로스,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도 반대 대열에 동참하였다. 이는 어업단체의 반발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조치였다. 나머지 21개 EU 회원국은 금지안에 찬성하였지만, 6개국의 반대에 때문에 EU 차원의 공동입장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렇듯 EU집행위원회가 주도한 EU 차원에서의 참다랑어 교역금지에 대한 첫 시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모나코의 참다랑어 무역규제안과 CITES 회의

한편 모나코는 2009년 7월에 발표한 초안을 바탕으로 대서양 및 지중해 연안 참다랑어 무역 금지안을 CITES에 2009년 10월 제출하였다. EU집행위원회는 2009년 7월 모나코가 참다랑어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초안을 발표했을 때 지지했던 것처럼, 모나코가 2009년 10월 CITES에 제출한 대서양 및 지중해 연안 참다랑어 무역 금지안을 EU 회원국들이 지지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EU집행위원회는 대서양 참다랑어가 ‘CITES 협약’의 부속서 1에 등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CITES 협약’의 부속서 1에 속한 동식물은 멸종위협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종들이다. 부속서 1에 속한 동식물의 교역은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참다랑어가 부속서 1에 등재된다는 의미는 참다랑어의 무역이 금지된다는 뜻이다.

미국과 EU집행위원회가 참다랑어의 국제교역 금지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3월에 개최된 ‘CITES 협약’ 회의에서 대서양과 지중해산 참다랑어의 어획 및 수출입 금지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치 못하게 부결되었다. 또 모나코의 제안과는 별도로 EU 의장국인 스페인이 참다랑어 무역을 금지하되 실시 시기는 2011년 5월 이후로 미루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또한 찬성 43표, 반대 72표, 기권 14표로 부결되었다.

참다랑어 국제교역 금지안이 부결된 데는 일본 정부와 업계의 로비가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정부는 표결 하루 전날인 17일 밤 리셉션을 열어 다른 나라 대표단을 설득하는 등 참다랑어 국제교역 규제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일본은 개발도상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원양어업에서 참치의 비중이 높은 한국정부도 일본정부의 손을 들어주었고, 상어 지느러미 수입 비중이 높은 중국도 상어 무역 금지 조치 때문에 민감하던 차에 상호지원을 전제로 일본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무역규제안 부결과 각국 및 NGO 입장

참다랑어 무역 금지안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나라들은 미국과 노르웨이, 케냐였다. EU도 원칙적으로는 참다랑어 무역 금지에 찬성하였지만, EU가 당장 실시에서 1년 유예로 입장을 바꾸면서 미국과 유럽이 형성한 공동전선이 깨졌다. EU의 입장은 참다랑어 무역금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시기를 2011년 5월까지 늦추자는 것이다. 또한 EU는 참다랑어 교역 금지안이 실시되더라도 EU의 소규모 어선단은 자국의 수역에서 잡은 참다랑어를 EU 시장에

EU 통합에서 배우는 아세안의 경제통합

What ASEAN can learn from EU's economic integratio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s plan to create the ASEAN Free Trade Area(AFTA), initially devised by its six leading nations, is gaining momentum as AFTA's tariff reduction obligations have been fully met since January, 2010. ASEAN's aims do not only include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market liberalisation, but also include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among its members. Previously, its approach has been somewhat conservative, but the leaders of member nations are increasingly pushing for a more active process such as the one through which the EU had achieved its integration. Every regional economic community is unique, reflecting member nations' historical backgrounds and hence it is not likely that the ASEAN would follow similar footsteps that the EU has been taking. On the other hand, there are important lessons to be learnt from the success and failure of EU's economic integration efforts.

최근 아세안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시화

아세안(ASEAN) 선발 6개국은 2010년 1월부터 역내 무역에 대한 관세를 폐지함으로써 1990년대 초부터 추진해온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완성에 한층 다가섰다.¹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움직임은 양자 간 상이한 FTA를 주축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흔히 '스파게티 접시(spaghetti bowl)'로 표현되곤 한다. 아세안은 동아시아 유일의 다자간 공동체로서 최근 경제통합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아세안은 2007년 '아세안 현장'과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설립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며 단계적 경제통합 의지를 밝혀왔으며, 2009년 2월에는 '후아한 선언'을 통해 역내무역의 완전자유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후아한 선언에서는 2010년까지 항공, 의료, 관광 분야를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물류서비스를, 2015년에는 모든 산업부분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회원국 간의 역내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협력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데, 과거 소극적이던 통합방식에서 벗어나 EU식 통합을 추진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세안의 역내무역 자유화 추진 배경과 현황

과거 정치적 목적으로 창설된 아세안이 역내무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통합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시점은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² 미국, EU, 일본 등 이른바 삼각지역(Triad)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구조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아세안이 경제통합을 시도하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3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아세안 국가의 내부적 요인인 산업정책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수출과 외자유치에 의존했던 아세안 선발국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보다 많은 투자가 절실했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통합을 통해 아세안을 하나의 단일 생산기지로 묶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둘째,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정체현상을 보이는 반면,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세안의 역내무역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장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셋째, 199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지역주의의 확산을 들 수 있다. 북미자유무역지

¹ 아세안 회원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상 1967년 창립 멤버), 브루나이(1984년), 베트남(1995년), 라오스(1997년), 미얀마(1997년), 캄보디아(1999년)의 총 10개국이며, 이 중 선발 6개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임. (괄호 안은 가입 연도)

² 아세안은 인도차이나의 공산화와 공산계열라의 내전축발 위험 등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갈등에 지역 내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1967년에 창설됨.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는 참다랑어 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몰타 등의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참다랑어 교역 금지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세계 최대 참다랑어 수입국이며, 대서양과 지중해 지역 국가에서 수입하는 참다랑어의 양은 일본 전체 참다랑어 소비량의 40%가 넘기 때문이다. 금지안이 채택되어 일본이 대서양 참다랑어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 일본에서 '참다랑어 가격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 협상단은 수출입 금지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CITES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일본 수산업 종사자들은 참다랑어 개체 수 감소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CITES 협약' 회의가 아닌 ICCAT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ICCAT는 참다랑어 어획량 쿼터제를 시행하면서 할당량을 낮추고 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참다랑어 어획 쿼터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 어획량이 할당량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어획량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월 18일 참다랑어 무역 규제안이 부결되자, 규제를 찬성했던 미국은 이번 결과가 일본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톰 스트릭랜드(Tom Strickland) 내무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일본의 상업적인 이해관계와 ICCAT와 같은 규제기구의 직무유기로 참치 거래 규제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번 결정으로 대서양 참다랑어 보존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것이지만 이들이 멸종하지 않도록 미국은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참다랑어 무역 금지안이 부결되자 안도와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토야마 총리는 참다랑어 무역 금지안이 부결된 당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다랑어의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므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참다랑어 무역 금지안 지지국의 반격에 대한 대비를 주문하였다.

반면, NGO인 세계자연보호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은 전 세계 소비자들, 레스토랑, 그리고 소매업자 차원에서 참다랑어 불매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국제해양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NGO인 오세아나(Oceana)도 각국이 대서양, 지중해산 참다랑어 어족자원의 회복보다 단기적인 경제 이익을 우선했다며 참다랑어 교역 금지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가들을 비난하였다.

무역규제안 부결과 EU의 반응 및 향후전망

EU 환경담당 집행위원 포토치닉과 해운 및 어업담당 집행위원 다마나키는 성명에서 EU 측의 제안이 참다랑어와 어민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강한 조치였다면서, 다른 국가가 EU 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EU는 대서양 참다랑어의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존을 위한 조치에 전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ICCAT는 책임을 다해서 참다랑어 개체 수를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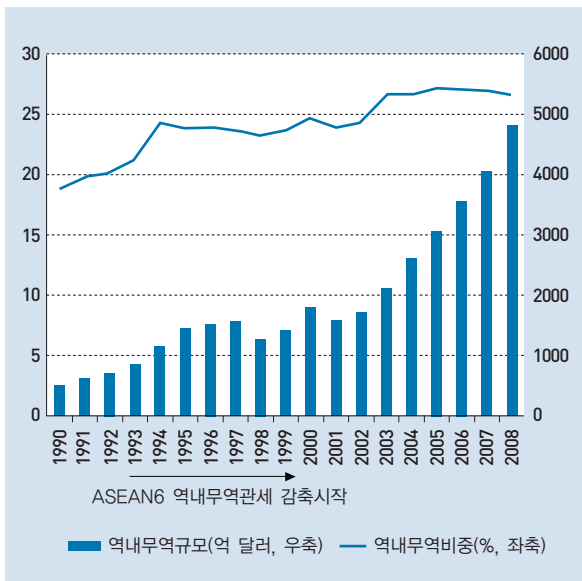
향후 대서양에서 참다랑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EU집행위원회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회원국들의 공통입장을 이끌어 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EU 차원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 분야에 대한 대비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EU 회원국들이 참다랑어 무역 규제를 통해 참다랑어 어족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안상욱 한서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대(NAFTA)의 등장과 EU의 단일시장 완성은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을 촉발시켰으며, 이로 인해 개도국들 간에 FTA 체결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지역주의의 대두는 이미 협의 차원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던 아세안에게 본격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 아세안의 역내무역량과 비중 변화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아세안 회원국은 1992년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의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1994년에는 ‘공공유효특혜관세(CEPT)’를 도입해 2008년까지 민감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교역에 대한 관세를 5%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1999년에는 AFTA를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아세안 선발 6개국(ASEAN 6)의 역내무역관세를 철폐할 것을 결정했으며, 후발 4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은 2015년부터 관세철폐를 시행할 계획이다.

2008년 아세안의 역내무역 규모는 4,827억 달러로 AFTA의 추진 전인 1990년에 비해 9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다. 1990년 19% 수준이었던 역내무역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이후 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EU와 NAFTA 등 선진국 중심으로 구성된 경제공동체의 역내무역 비중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들의 경제규모가 크지 않고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세안 역내무역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원국 간 상이한 정치·경제 제도와 발전 수준의 격차, 지리적 제약조건 등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통합의 성과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U와 비교해본 아세안의 경제통합

역내무역 비중의 변화를 통해 아세안의 경제통합 정도를 EU의 통합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EU의 발전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EU의 경제통합은 1957년 로마조약을 통해 설립된 관세동맹 성격의 유럽경제공동체(EEC)로 거슬러 올라간다. EEC 출범 당시 유럽 국가들은 상이한 대외관세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 보호무역적인 경향이 강했다. 반면, 공산품 경쟁력이 뛰어났던 독일은 저관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EEC 6개국³은 10년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역내무역을 자유화하고 대외공동관세를 채택하였다. 또한 GATT 체제하의 딜런 라운드(1960~1962년)부터는 EU집행위원회를 통해 다자간 협상에 공동 대응하는 등 경제공동체로서의 대외적 입지를 굳혀나갔다.

한편 본격적인 경제통합이 시작되기 전부터 유럽 국가들은 높은 역내무역 비중을 보여왔다. EEC의 역내관세가 철폐되기 시작하던 1958년 EEC 6개국 간

³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 EEC 출범 초기의 회원국 및 유럽 주요국들의 대외 관세 변화

회원국	1958년	딜런 라운드 이후	1968년	케네디 라운드 이후
벨기에	9.7	8.7	10.4	6.6
프랑스	17	15.3	10.4	6.6
독일	6.4	5.8	10.4	6.6
이탈리아	18.7	16.8	10.4	6.6
네덜란드	9.7	8.7	10.4	6.6
영국	16.5	14.9	14.9	9.2
덴마크	5.6	5.2	5.2	3.2
오스트리아	14.9	11.4	11.4	8.2
스웨덴	6.5	6.3	6.3	4.2
노르웨이	10.3	10.3	10.3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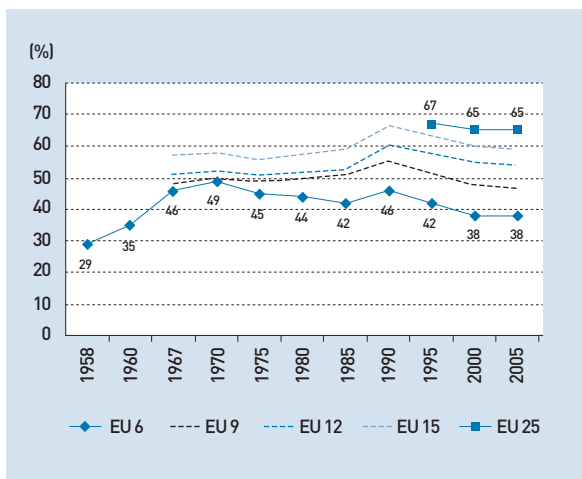
주: 딜런 라운드(Dillon Round)는 1960~1962년,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는 1964~1967년
자료: Resnick and Truman, (1975)

의 역내무역 비중은 이미 총 교역의 30%에 근접했으며, 관세동맹이 완성된 직후인 1960년대 말에는 50%에 이르렀다. 서유럽 15개국(EU15)을 기준으로 볼 경우 1990년대 초 역내무역은 전체 교역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다. 유럽 국가들의 높은 역내무역 비중은 아세안의 역내무역 비중이 AFTA의 설립 추진 당시(1992년) 20%에 채 못 미쳤으며, 현재에도 30% 미만인 점과 대조를 이룬다. 유럽 국가들의 높은 역내무역 비중은 역사적으로 일찍부터 발달한 국가 간의 교역활성화와 중상주의에 입각한 무역촉진정책, 문화적·지리적 근접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도적인 유럽 통합의 움직임이 있기 전부터 무역차원의 지역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의 경제통합 움직임과는 차이를 보인다.

한편 1970년대 2차례의 석유파동을 기점으로 저성장기에 접어든 유럽 각국은 경제통합을 가속화시켜 생산성과 소비자 후생의 증대를 도모했다. 1980년대 이후에 대폭 강화된 역내비관세제도의 철폐와 각국 간 규제의 수렴은 단일시장에 기반을 둔 EU의 통합 모델을 확립시켰다. EU의 단일시장화는 EU가 초국

가적(supranational) 접근방식과 정부 간(inter-governmental) 접근방식의 긴장 속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정치공동체를 지양하며 EU 차원의 강력한 상위규범(acquis communautaire)을 발전시켜왔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 EU 역내무역 비중의 변화⁴



주: 1) EU 회원국의 증가를 감안하여 그룹별 역내무역 비중을 계산.
2) 그룹에 관해서는 각주 4를 참조.
자료: 저자의 계산과 Agur, et al. (2007)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그 출발점부터 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역내무역 증진에 한정되는 통합모델을 지향해왔다. 이는 회원국 간에 정치·경제 체제가 상이하며,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아세안의 특징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아세안이 추구하는 경제통합은 적어도 지금까지의 발전과정을 돌아볼 때 전략적, 도구적 차

⁴ EU 6: EEC의 창설 회원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EU 9: EU 6+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EU 12: EU 9+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EU 15: EU 12+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EU 25: EU 15 +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원의 지역주의로 평가될 수 있으며, 하나의 공동체를 완성해나가는 큰 비전보다는 각국의 사정에 맞는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

EU의 경제통합이 아세안에 주는 의미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EU 경제통합은 앞으로의 아세안 경제통합 움직임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 모든 지역경제공동체가 독특한 역사적 궤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EU의 발전과정이 아세안에서 재현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아세안 발전과정을 돌아볼 때 EU의 경제통합 발전과정과 유사한 점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EU의 무역통합은 전후 포디즘(fordism)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구사하던 1950~1960년대에 이루어진 것이 특징인데, 이는 아세안의 역내무역 자유화가 1990년대 아세안 회원국이 고도성장을 경험한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과 유사하다. 둘째로 EU의 경제통합은 역내 관세철폐를 통해 무역통합이 완성된 후 비관세장벽 철폐와 각국 간 규제 수렴에 노력이 집중되었는데, 아세안의 경우에도 후아헌 선언을 통해 공표된 바와 같이 앞으로의 발전과정에서 과거 EU의 패턴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양상을 띤다.

아세안은 앞으로 역내관세의 완전철폐를 통해 자유무역지대를 완성하는 한편, 서비스 산업 개방을 위해 각국 간의 규제를 조율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세안 국가들은 지역적으로 널리 흩어져 있고, 정치·경제 체제가 상이하며,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정치, 사회, 경제 등 분야에서의 정책공조에 관한 전통과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통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아세안은 앞으로 빈곤과 저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 문제가 되어왔던 정책적 실행능력을 증진시키고, 공동의 통상정책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아세안이 표방하기 시작한 EU식 경제통합공동체의 창설은 사실 현실적

인 정책목표라기보다는 경제협력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러한 다소 유보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세안은 동아시아 유일의 다자간 경제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FTA의 수준을 넘어서는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韓·中·日을 포함한 동아시아 통합의 실험무대로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Agur, Itai., Dorrucchi, Ettore. & Paolo Mongelli, Francesco. (2007). How did European Institutional Integration and Intra-European Trade Interact? *Économie internationale*, 109(1), 107~146.

Kurus, Bilson. (1995). The ASEAN Triad: National Interest, Consensus-seeking and Economic Cooperatio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6(4), 404~411.

Resnick, Stephen. & Truman, Edwin. (1974). An Empirical Examination of Bilateral Trade in Western Europ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4), 305~335.

Sakakibara, Eisuke. & Yamakawa, Sharon. (2003. 6. 5.).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079). World Bank.

EU 기업들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

Recent performance of EU's most valuable brands

International success of European corporations is important for their home countries' economic performance since some European countries' markets and their economic size are relatively small. Brand values of European corporations that aimed to satisfy wealthy consumers increased rapidly during the boom time of 2000s, and those which struck the right balance between accessibility and authenticity have been holding up relatively well during the recession. European brands in the luxury market are exceptionally strong yet EU corporations' brand values are still lower than those of US' major corporations in general. Changes in future brand values will depend on how successful the corporations are in taking advantage of changes in emerging market consumers' spending habits.

2001~2005년 사이 EU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대폭 상승

경제규모가 작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기업의 성패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한다. 즉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는 EU 기업들에게는 물론 EU 국가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¹ 2001년 인터브랜드가 선정한 세계 100대 브랜드를 살펴보면, 미국기업은 62개, EU 기업은 27개가 포함되어 있다.² 세계 100대 브랜드에 포함된 EU 기업들의 총 브랜드 가치는 미국의 5분의 1 수준인 1,533억 달러였다. EU 기업들 중에는 독일기업이 7개, 영국기업이 5개 포함되어 있었고,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기업이 각각 3개씩 포함되어 있었다. EU 기업들 중 세계 10대 기업에 포함된 노키아의 브랜드 가치는 350억 달러이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은 EU 기업들 중 2, 3, 4위를 차지하며 EU 자동차 산업의 비교우위를 보여주었다.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류와 럭셔리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¹ 노키아의 2008년 총 매출액은 핀란드 GDP의 27% 수준인 742.2억 달러를 기록.

² Best Global Brands의 100대 브랜드는 3단계를 통해 정해짐. i) 브랜드 제품 판매를 통한 현재 기업 매출액과 전망치에서 영업경비, 세금, 자본비용을 빼 기업의 경제적 수익을 산출. ii) 기업의 경제적 수익에 인터브랜드의 시장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각 브랜드의 수익을 산출. iii) 브랜드의 중장기적 수요 창출 가능성을 7대 핵심요소 (시장 포지션, 리더십, 트렌드, 업종 다양화, 브랜드 지원 수준, 안정도, 브랜드 보호 수준)를 통해 분석한 후 브랜드의 수익에 적용시켜 브랜드 가치를 결정.

2000년대 초 세계경제가 호황을 맞으면서 중상위 소비층을 집중 공략한 EU 기업들이 선방하였다. 2001~2005년 세계 100대 브랜드에 포함된 미국기업은 62개에서 53개로 크게 줄어든 반면, EU 기업은 27개에서 31개로 늘어났다. 2005년 세계 100대 브랜드에 포함된 EU 기업들의 총 브랜드 가치는 2001년 대비 496억 달러 증가한 2,029억 달러였고, 미국기업들의 총 브랜드 가치는 317억 달러 하락한 7,08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산업별로는 주류기업이 7개에서 4개로 줄어든 반면, 자동차기업은 3개에서 5개로, 럭셔리 기업은 4개

★ 2001년과 2005년 EU 10대 브랜드 순위

EU내 순위	2001년		2005년	
	세계순위	기업명	세계순위	기업명
1	5	노키아	6	노키아
2	12	메르세데스 벤츠	11	메르세데스 벤츠
3	22	BMW	16	BMW
4	35	폭스바겐	18	루이비통
5	36	에릭슨	29	HSBC
6	38	루이비통	36	SAP
7	43	SAP	42	이케아
8	46	이케아	45	지멘스
9	50	구찌	49	구찌
10	52	로이터	52	로레알

자료: Interbrand (2001), Best Global Brands 2001.; Interbrand (2005), Best Global Brands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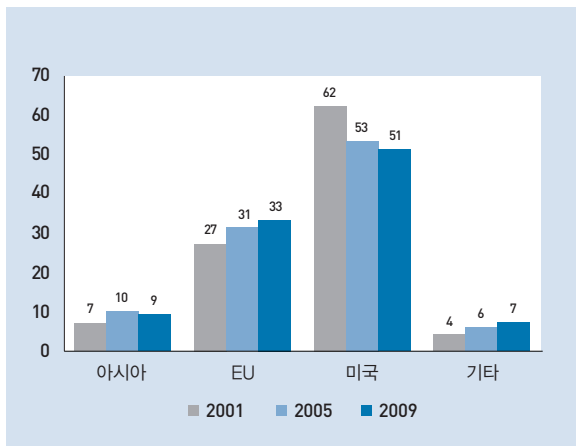
에서 7개로 늘어났다. 세계 100대 브랜드에 포함된 독일기업은 2001년 7개에서 2005년 9개로 증가하였고, 프랑스 기업은 3개에서 7개로 증가하였다. 세계 100대 브랜드에 포함된 프랑스 기업들의 총 브랜드 가치는 2005년에 200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411억 달러를 기록하며 733억 달러를 기록한 독일을 추격하였다. 특히 럭셔리 산업의 성장에 힘입은 프랑스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패션업계의 최고급 브랜드인 루이비통의 브랜드 가치는 2001년 70.5억 달러에서 2005년 160.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EU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상승

경제위기 이후 2009년 세계 100대 브랜드에 포함된 EU 기업은 33개(2005년 31개)로 증가했고, 미국 기업은 51개(2005년 53개)로 줄어들었다. 세계 100대 브랜드에 포함된 EU 기업들의 총 브랜드 가치는 2005년 대비 3분의 1가량 증가한 2,755억 달러였고, 미국기업들의 총 브랜드 가치는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인 7,26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Fortune*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상위 100대에 포함된 기업들 중 EU 기업은 45개로 2005~2009년 사이 변동이 없었으나, 미국 기업은 33개에서 29개로 감소했다. *Fortune* 글로벌 100대 기업에 포함된 EU 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2005년 3조 5,882억 달러에서 2009년 5조 5,03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반면, 미국기업들은 3조 100억 달러에서 3조 8,407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였다. 2005년 상위 20대 EU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1123.3억 달러로 상위 20대 미국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인 1174.9억 달러보다 다소 낮았으나, 2009년에는 1697.4억 달러를 기록하며 1593.0억 달러를 기록한 상위 20대 미국기업들을 제쳤다.

2009년 세계 100대 브랜드에는 EU 국가들 중 독일기업이 11개로 가장 많았으며, 프랑스기업이 8개, 영국과 이탈리아 기업이 각각 4개씩 포함되었다. 세계 100대 브랜드에 포함된 독일기업들의 총 브랜드 가치는 2005년 대비 233억 달러 증가한 966억 달러였고, 프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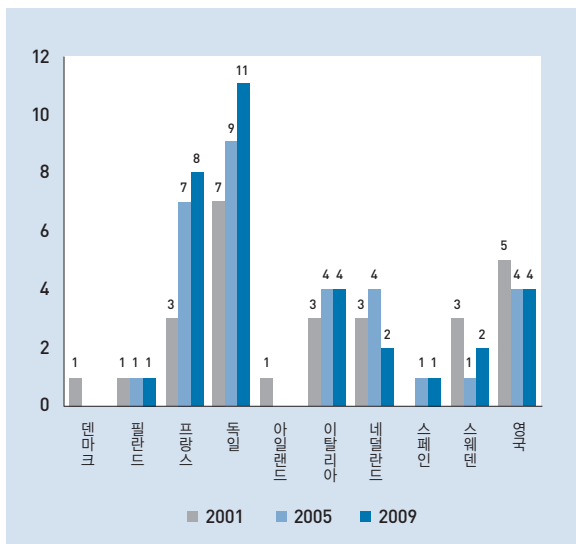
★ 지역별 세계 100대 브랜드 수



주: 기타 지역에는 스위스 기업이 3개(2001년), 6개(2005년), 5개(2009년) 포함.
자료: Interbrand (2001), Best Global Brands 2001.; Interbrand (2005), Best Global Brands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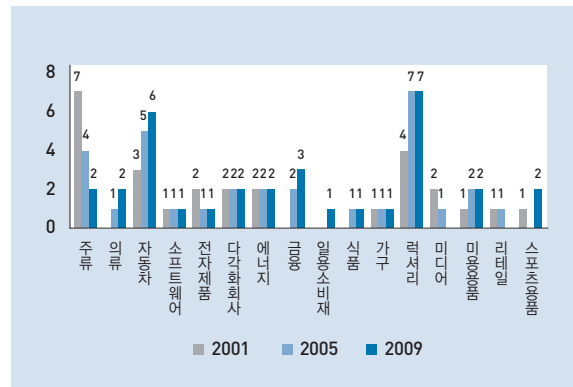
스 기업들의 총 브랜드 가치는 179억 달러 증가한 590억 달러였다. 한편 같은 기간 이케아(IKEA)의 브랜드 가치가 53.6% 증가하고 H&M이 세계 100대 브랜드에 진입하여, 스웨덴 기업들의 총 브랜드 가치는 2005년 대비 3.5배 이상 증가한 274억 달러를 기록했다.

★ EU 국가별 세계 100대 브랜드 수



자료: Interbrand (2001), Best Global Brands 2001.; Interbrand (2005), Best Global Brands 2005.

★ 산업별 EU 브랜드 수



자료: Interbrand (2001), Best Global Brands 2001.; Interbrand (2005), Best Global Brands 2005.

산업별로 살펴보면, EU의 주류기업은 2001년 이후 세계 100대 브랜드에서 5개가 사라지고, 2009년에는 2개만 남았다. 금융과 자동차 산업은 2005년 이후 각각 1개씩 늘어난 3개와 5개 기업이, 럭셔리 산업은 2005년과 같은 7개 기업이 세계 100대 순위에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중저가 의류기업의 수는 2001년 0개에서 2009년 2개로 증가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기업들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

세계 100대 브랜드에 포함된 금융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는 2000~2008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8~2009년 사이에는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 이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기업들에 대한 배타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며, 금융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금융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는 EU 금융기업들보다 더욱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씨티은행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49% 하락하며 19위에서 36위로 밀려났고, 모건스탠리의 브랜드 가치는 26% 하락하며 42위에서 57위로 밀려났다.

반면, 미국 5대 금융기관 중 2곳이 사라진 가운데 안정된 사업기반을 갖고 있는 EU의 금융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AXA(55위→53위)와 독일의 알리안츠(82위→81

위)의 브랜드 가치는 각각 7%와 5% 감소하며 비교적 선방하였다.³ 또한 영국의 바클레이즈는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고 국내외에서 신뢰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며,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미국 IB 사업 부문을 인수하며 북미시장 점유율 확보와 사업다양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은 미국 금융기업들의 쇠퇴를 기회로 삼아 미국 소매금융시장을 집중공략하기 시작했다.

자동차 산업은 경제위기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에서의 급격한 수요 감소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였다. 2009년 세계 100대 브랜드에는 5개의 독일 자동차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12위), BMW(15위), 폭스바겐(55위), 아우디(65위), 포르쉐(74위)의 브랜드 가치는 2008년에 비해 모두 7~8%가량 하락하였다. 하지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해 2008년 기업 이익이 28% 증가한 이탈리아의 페라리(88위)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과 동일하게 평가되었다.

EU 럭셔리 기업들의 막강한 브랜드 파워

럭셔리 또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EU 기업들의 브랜드 파워는 막강하다.⁴ 전 세계 럭셔리 산업의 매출 규모는 2004~2008년 사이 연평균 6% 성장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 럭셔리 산업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은 결과를 보였다. 2009년 세계 럭셔리 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8% 감소한 1,580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시장에서의 럭셔리 산업 관련 매출과 온라인 판매 매출이 각각 12%와 20% 증가하여 심각한 침체를 막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⁵

³ 금융계의 절대강자인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체이스의 브랜드 가치는 각각 -10%와 -11% 하락.

⁴ 세계 100대 브랜드에 럭셔리 기업이 11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유럽 기업(스위스 포함)이 9개를 차지.

⁵ Bain & Company (2009.10.21.), Strength by luxury goods shoppers in Asia and online bring glimmers of hope to beleaguered industry. Press Release.





★ 2009년 세계 및 EU 10대 브랜드 순위

세계 10대 브랜드			
세계순위	브랜드	지역	가치(억 달러)
1		북미	687.3
2		북미	602.1
3		북미	566.5
4		북미	477.8
5		EU	348.6
6		북미	322.8
7		북미	319.8
8		아시아	313.3
9		북미	306.4
10		북미	284.5

자료: Interbrand (2009), Best Global Brands 2009.

이처럼 현재 럭셔리 시장에서의 키워드는 ‘신흥국’이다. 베인&컴퍼니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의 럭셔리 제품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16%, 10%, 8% 감소했으나 아시아에서는 10% 증가했다. 2009년 신설된 직영매장의 수는 대략 300여 개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중 대다수가 신흥국에서 개장된 것으로 보인다.⁶ 이 같은 추세에 주된 이유로는 신흥국 부유층의 급격한 자산 증가, 선진국들의 저조한 경제성장, 그리고 럭셔리 제품 구입을 사치라고 여기는 일부 선진국들의 소비문화 변화를 꼽을 수 있다.

한편 경제위기와 함께 럭셔리 제품의 구매 건수를 줄이는 대신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 성향이 강화되며 ‘대중적 럭셔리’ 시장을 겨냥하고 있던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타격받은 것으로 판단된다.⁷ 이런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럭셔리 기업의 브

EU 10대 브랜드			
세계순위	브랜드	지역	가치(억 달러)
5		핀란드	348.6
12		독일	238.7
15		독일	216.7
16		프랑스	211.2
21		스웨덴	153.8
27		독일	121.1
28		스웨덴	120.0
32		영국	105.1
41		이탈리아	81.8
42		네덜란드	81.2

랜드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2가지 전략을 모두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루이비통(16위), 구찌(41위), 그리고 프라다(87위)의 경우⁸, 최근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만한 직영매장들을 주요 도시에 개장하며 상류층 시장을 재공략하고 있다.

또 다른 성향으로는 경제위기 이후 중저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며, 중저가 제품시장에서의 브랜드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가격 절감만으로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스타일 개선과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중저가 의류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스페인 기업인 자라(50위)의 경우 1주 단위로 새로운 스타일의 의상을 선보이는 공급라인을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쇼핑경험과 구매습관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H&M(21위)은 스텔라 맥카트니, 칼 라거펠트, 로베르토 카발리와 같은 세계 최고 디자이너들과 작업하여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선보여 스웨덴의 중저가 신상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자라와 H&M의 브랜드 가치는 2009년 전년 대비 각각 14%와 11% 증가하며 브랜드 가치가 10% 감소한 미국의 갭(78위)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위기 대응능력 향상과 가치생산에 집중하며 약진하는 EU 기업들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유럽 기업들의 공통점은 긴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EU의 10대 브랜드 중 5개 기업이 19세기에 설립되었을 정도로 유럽에는 장수기업들이 많다.⁹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브랜드를 가진 EU 기업들은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新소비트렌드 형성에 앞장서기 위해 꾸준한 투자와 마케팅을 하고 있다. 친환경 소비층 확대에 대한 준비, 최상위 브랜드들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중저가 제품의 질적 개선을 통해 EU 기업들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타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선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EU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는 미국의 최고 기업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10대 브랜드에 포함된 코카콜라, 맥도날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미국의 상위 브랜드들은 모든 소비자층이 접근할 수 있는 반면, EU의 10대 브랜드는 특정 소비자층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메르세데스 벤츠, BMW 그리고 루이비통은 상위 소비층을 겨냥하고 있고 H&M과 이케아는 가격은 물론 제품의 질과 디자인에 민감한 소비층을 공략하고 있다. 선진국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은 지금 EU 기업들은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아세안 국가들 및 인도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고 한국과의 FTA는 곧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신흥국들과의 FTA를 통해 EU 기업들의 신흥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신흥국 시장의 구매력과 신흥국 소비문화의 변화를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EU 기업들이 미국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애널리스트

⁹ 루이비통은 1854년에, 노키아와 HSBC는 1865년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1881년에, 필립스는 1891년에 설립.

⁶ 15%는 중국에, 25%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에, 30%는 중동에, 15%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에서 개장한 것으로 추정.

⁷ 아르마니(89위)의 브랜드 가치는 2008년 대비 6% 감소한 반면, 최상류층을 겨냥한 에르메스(70위)의 가치는 1% 증가. 단, 롤렉스(68위)와 까르띠에(77위)는 최상류층을 겨냥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전 세계 보석 및 시계 산업의 2009년 매출이 전년 대비 18%나 감소함에 따라 브랜드 가치가 각각 6%와 7% 감소.

⁸ 2009년 이 브랜드들의 가치는 전년 대비 각각 2%, 1%, 2% 감소.





EU 경쟁법상 사전청문제도

Pre-hearing procedures on competition law in EU

The European Commission has been making a great effort to strengthen its competition law enforcement since the adoption of the Lisbon Treaty. The EC is firmly committed to tackle competition distortions of corporations in the EU market and as a result it is widely known that the EU has established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and effective bodies of regulations. The pre-hearing procedures play an important part in achieving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EU competition law.

사전청문제도의 개요

리스본조약 발효 후 EU집행위원회는 경쟁법의 집행 권한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각 회원국 경쟁당국의 협력과 지원에 힘입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EU 역내에서 발생하는 반 경쟁적 행위에 대하여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쟁정책은 실제적 영향력 면에서 EU 공동정책 중 가장 성공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EU 역내기업들은 경쟁법의 법리분석 및 구체책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경쟁법의 가장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규제절차의 하나가 ‘사전청문제도’이다.

1957년에 체결된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은 기본원칙으로 경쟁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조약은 경쟁을 제한하는 협정의 금지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1962년 이사회규칙 제17호를 제정하였다. 이사회규칙 제17호는 적용 제외, 조사권한 외에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배제조치, 위반행위 심사권한, 과징금 등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 규칙은 집행위원회가 적용 제외, 배제조치, 과징금 등에 관하여 결정할 경우, 사전에 관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집행위원회의 피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집행위원회 또는 회원국 소관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충분한 이해관계가 있

음을 증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청문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규칙 제17호의 청문절차와 관련하여1963년 위원회규칙 제99호가 제정되었는데, 이 규칙은 범위반으로 소추되는 관련 당사자, 사업자단체의 방어권으로 피의사항(objections) 고지를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과징금부과에 대해 이 고지가 행해지면 관계자는 일정기일 내에 서면으로 방어를 위한 견해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피의사항 고지범위 내에서만 최종결정(심결)을 행한다. 관계자의 서면청구로 구두청문을 행하며, 청문은 집행위원회가 지명한 자가 주최하고,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청문은 비공개이고 의사록을 작성하며, 청문 기일 및 기간은 사안의 긴급성과 피청문자의 준비 편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다.

요컨대, EU 경쟁법의 사전청문절차는 1962년 이사회규칙 제17호 및 1963년 위원회규칙 제88호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이 절차는 1980년대, 특히 1990년대 이후 일련의 판례에 따라 내용이 충실히 정비되었다. 현재는 2003년 이사회규칙 제1호 및 2004년 위원회규칙 제773호 그리고 위원회 자료의 열람복사규칙에 관한 위원회통지(2005/C 325/07)에 규정되어 있다.

사전청문절차의 구체적 내용

EU 경쟁법의 사전청문절차는 경쟁법상 피처분자의 방어권 문제로서, 법원 판례로 정비되어 왔다. 현재는

1962년 이사회규칙 제17호를 대체하여 2003년 이사회규칙 제1호가 제정되었고, 이사회규칙 시행을 위한 2004년 위원회규칙 제773호가 제정되었으며, 2005년 위원회자료(Commission file) 열람복사규칙에 관한 위원회통지가 제정됨으로써 정비되었다.

2004년 이사회규칙 제139호가 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채택되는 등 일정 요건하에 기업결합이 규제를 받지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사전청문절차가 적용된다. 또한 이사회규칙 시행규칙으로서 2004년 위원회규칙 제802호가 제정되었다. 사전청문절차는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신속히 종료되어 심결이 나오며, 이 심결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심 법원 및 사법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된다.

현재 EU의 경쟁법 위반사건 처리 절차는 2003년 이사회규칙 제1호에 규정되어 있고, 사전청문절차는 이 규칙 제8장 제27조와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규칙 제7조(위반행위의 정지), 제8조(위반행위의 잠정적 정지), 제23조(과징금) 및 제24조 제2항(과태료)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 집행위원회 절차의 대상이 되는 관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집행위원회의 피의사실(objections)에 대한 청문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관련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피의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들 조문에 열거된 각 조치에 대하여 모두 사전청문절차가 필요하지만, 판례는 특히 과징금 부과를 중시하고 있다.

2003년에 제정된 이사회규칙의 시행규칙인 위원회규칙(2004년) 제773호 제5장 청문권의 행사 제10조(피의사실의 설명과 답변)에 의하면, 집행위원회는 관련 당사자에게 피의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며, 피의사실 고지서는 각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관련 당사자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서면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모든 사실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자복사로도 가능하다. 위원회규칙 제11조(청문을 받을 권리)는 위원회가 경쟁법 자문위원

회(이사회규칙 제1호 제14조)에 사안을 제출하기 전에 청문을 행해야 하고 집행위원회는 관련 당사자에게 제시한 ‘피의사실’만을 기초로 심결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규칙 제12조(구두청문을 받을 권리)에 의하면 집행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문서 안에서 구두청문(oral hearing)을 요구할 경우 이를 행하여야 하고, 또 충분한 이해관계 있음을 밝힌 관련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자가 청문을 신청할 경우, 절차의 주제를 서면으로 알리고 서면으로 견해 제출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의 구두청문에 출석하게 할 수도 있다.

청문은 청문주재관이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실시한다(위원회규칙 제14조). 독립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2001년 위원회결정(2001/462/EC, ECSC)이 있다. 구두청문에는 당사자 및 회원국 경쟁당국이 출석해야 한다. 청문에 출석하는 자는 변호사를 동반할 수 있고(위원회규칙 제773호 제14조), 청문은 비공개이지만, 청문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기록은 출석자에게 송부된다.

이사회규칙 제1호 제27조에 의하면 관련 당사자의 방어권은 청문절차에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관련 당사자는 영업비밀의 법적 이익보호를 조건으로 집행위원회 자료의 열람복사권을 갖는다. 자료의 열람복사와 비밀정보의 취급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773호 제6장 제15조(자료의 열람복사 및 자료의 사용)에 의하면, 집행위원회는 신청이 있을 경우, 피의사실 고지서 수취인인 당사자에게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가하여야 하고, 열람복사는 피의사항 고지서가 통지된 후에 허용되며, 이렇게 얻은 자료는 EC 조약 제81조 및 제82조의 적용을 위한 사법절차 및 행정절차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위원회자료 열람복사규칙에 관한 위원회통지(2005/C 325/07)는 피청문자의 위원회자료 열람복사권에 대하여 판례를 포함하여 상당히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통지 제1장에 의하면, 위원회자료 열람(access)은 ‘무기평등 일반원칙’의 적용과 방어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절차상의 보장조치이며, 위원



회는 피청문자에게 피의사실에 대한 견해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절차상 변호권을 충분히 존중할 수 있도록 위원회자료를 열람케 해야 한다. 자료의 열람복사는 피의사실 고지서 송부를 받은 자에 한정되며, 대상이 되는 위원회자료의 내용은 위원회 경쟁총국이 당해사건 심사 중 취득, 작성하거나 수집한 모든 자료이며, 전자정보를 포함한다. 절차 당사자는 위원회가 제시한 피의사실에 대해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위원회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숙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위원회자료 모두를 열람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 자료를 열람복사자료(accessible documents)라고 부른다.

내부자료, 영업비밀 및 기타 비밀자료는 '非열람복사자료'라고 부르는데, 이는 2003년 이사회규칙 제1호 제27조에서 규정되었고, 판례로 인정되었다. 非열람복사자료 중 내부자료란 집행위원회 부서나 다른 공적 기관의 의견, 메모 등으로 유죄 또는 무죄 입증에 사용할 수 없는 자료이며, 그 자료의 개시를 제한하더라도 당사자의 자료열람복사권 행사를 왜곡하지 않는 자료이다. 위원회와 다른 회원국 등 공적 기관과의 왕복문서도 이에 포함된다. 영업비밀은 영업상 비밀이며, 기타 비밀자료란 프라이버시 관계 등인데, 모두 비밀부분을 제외하고 열람복사가 가능한 非비밀자료판(non-confidential version)으로 작성된다. 군사비밀도 비밀자료에 포함된다. 관계자는 비밀문서의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비밀자료로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 공지된 정보는 비밀자료가 아니며, 5년 전의 영업 데이터도 비밀이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 비밀자료가 위반입증 또는 위반이 아니라는 입증에 필요한 자료인 경우에는 열람복사가 허용되는데, 이는 관계당사자의 방어권 보호 필요성이 비밀보호 필요성에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료의 열람복사권은 피의사실 고지서가 통지되기 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위원회가 관계당사자에게 피의사함을 통지한 후, 무기평등원칙하에 관련 당사

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자료열람복사를 허용한다. 또한 이는 행정절차 이후 과정에서도 허가된다. 독점금지 절차상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도 자료열람복사가 허용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자료열람복사권과는 다르다. 위반행위 신고자는 집행위원회가 2003년 위원회규칙 제773호 제7조에 의한 청구를 거부한 경우 거부 근거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비밀 자료에 대해 그 이유를 대고 별도의 非비밀자료판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관련자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자료열람복사의 방법으로 CDROM 송부, 자료 복사문서 우송, 또는 위원회사무소에서의 열람복사를 선택적으로 행할 수 있다. 관련 당사자는 열람복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통지된 위원회자료 전체의 열거목록을 수취할 수 있다. 열거목록에는 자료내용의 개요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의사실 고지서에 첨부된다. 관련 당사자가 非열람복사자료의 열람복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고, 경쟁총국장이 그것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청문주재관이 문제를 해결한다. 청문주재관의 결정은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 집행위원회 자료의 철저한 전문개시가 그 후의 쟁점정리와 증거조사의 신속·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집행위원회 자료의 열람을 통해 얻은 정보는 당해 행정절차상의 관계법령 적용을 위한 사법상 또는 행정절차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이로써 사전청문절차의 심리 집중화가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 혼란을 회피함으로써 신속한 절차와 조기 결론을 내리는 데 유용하다.

관련 절차

2003년 이사회규칙 제1호 제8조(잠정조치명령: interim measures)에 의하면, 집행위원회는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정도에 따라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명백한(prima facie) 증거에 기초하여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결정은 특정기간에

적용되고, 필요성과 적절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또한 2003년 이사회규칙 제1호 제9조(합의조치: commitments)에 의하면 집행위원회는 위반행위 관련 사업자가 집행위원회 표명 의사에 대응한 합의를 신고한 경우 사업자를 구속하는 합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지정된 기간에 행할 수 있고, 결정 후에는 집행위원회의 정식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아울러 집행위원회는 결정의 기초 사실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경우, 관련 사업자가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취한 경우, 또는 결정이 당사자의 제공에 의한 불완전·부정확 또는 오인된 정보에 기인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정식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한편, 2003년 이사회규칙 제1호 제5장 '심사권한'에 의하면, 집행위원회는 특정 경제분야 또는 특정 사항에 관한 일반적 조사권한 외에,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정보청구, 진술녹취권 및 출입검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청구하는 정보를 특정하여 조사의 법적 근거 및 목적을 제시하고, 부정확하거나 오인의 소지가 있는 정보의 제공에는 별척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 심사를 회원국 경쟁당국과 협력하여 행할 수 있다. 2004년 위원회규칙 제773호 제3장 위원회 심사권한 제3조(진술녹취권)에 의하면, 집행위원회가 2003년 이사회규칙 제1호 제19조에 의하여 인터뷰할 경우, 먼저 법령의 근거와 목적을 전하고 임의의 진술임을 알리며, 또 기록하고 있음도 알려야 한다. 인터뷰는 전화 또는 전자 방법으로 행하고, 반드시 인터뷰 기록을 작성하여 기록사본을 진술자에게 제공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위원회규칙 제4조(출입검사중의 구두질문)는 심사관이 이사회규칙 제20조에 의해 설명을 요구할 경우 진술은 기록되고, 기록 사본이 상대방에게 제공된다.

위반사건은 대부분 관련사업자에 의하여 신고되는데, 이 신고는 2003년 이사회규칙 제1호 제7조에 근거규정이 있고, 2004년 위원회규칙 제773호 제5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 신고의 취급에 관한 위원회통

지(2004/C 101/05)가 제정되어 있다. 신고는 2004년 위원회규칙 제773호 부속서식으로 행하고, 신고 내용과 그것을 보증하는 증거, 이해관계, 요구조치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포함될 경우 非비밀자료판을 첨부한다. 이상의 규정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심사활동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보가 있어야 심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를 받아 집행위원회가 피의사항 고지서를 발송할 경우 피의사실 고지서의 非비밀자료판 사본을 신고자에게 송부하고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통지한다. 집행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 이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수리를 거부하는 뜻을 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거부의 근거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신고수리거부 결정에 대하여 신고자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이는 판례로 인정되고 있다.

2003년 이사회규칙 제1호 제28조는 직무상 비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위원회가 심사권한에 따라 수집한 정보는 수집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집행위원회, 회원국 경쟁당국 및 직원 등 관계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직무상 비밀로 해야 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누설이 금지되어 있다. 위원회규칙 제773호 제16조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비밀 또는 비밀정보는 보호되며, 모든 자는 비밀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여 집행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집행위원회 자료의 열람복사규칙에 관한 2005년 위원회통지(2005/C 325/07)에 의하면, 자료의 열람복사로 얻은 정보는 당해 행정절차상 공동체 경쟁법 적용을 위한 사법상 또는 행정절차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절차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열람복사 가능한 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한다. ★

정 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U 스포츠 정책의 과거와 현재¹

Past and current EU sports policies

European federalists claimed the EU victory at the Vancouver Winter Olympics. Athletes from EU member states won 108 medals altogether at the 2010 Winter Games, which is almost three times more than the US. The Young European Federalists' (JEF-Europe) Vice-President Pauline Gessant argued that this joy should not be limited by national borders and added that one should "think European" instead. He hopes that EU athletes' performance at various sports events will be able to promote the European motto 'United in diversity'.

유럽 통합에 기여할 유럽 스포츠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유럽연방주의자들 사이에서 이번 올림픽의 진정한 승자는 EU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올림픽의 성과를 유럽 단위로 셈하면 27개 회원국의 메달 수가 미국의 세 배가 넘기 때문이다. 젊은유럽연방주의자(Young European Federalists)의 부회장인 Pauline Gessant는 이런 경사가 왜 국경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유럽적으로 자축할 일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스포츠 분야에서도 EU의 정체성이 적극적으로 지지받아야 하며, EU는 국가주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국가주의와 맞서 싸워야 하는 운명이라고 덧붙였다.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EU의 모토가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행사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젊은유럽연방주의자의 이러한 주장과 EU 차원의 움직임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도 등장하였다. 그들은 경기가 열리는 현장에서 회원국 국기와 EU의 기가 함께 걸려야 하며, 그것은 EU의 가치를 선양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스포츠의 정치적 본질

주지하다시피 스포츠가 국가 정체성 확립 또는 통합

에 기여한 역사는 오래되었다. 올림픽 이야말로 역사의 전형이다. 고대 올림픽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을 잇는 세속의 것이 아닌 신과 인간을 연결하고자 하는 종교 행사, 즉 미토스(mythos)의 언어였다. 그리고 세속의 올림픽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스포츠는 인간이 육체의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고 벗어나려는 힘을 보여주는 사건이기에 인간 이성의 영역인 아고라 광장, 즉 민주주의의 근원과 대립한다. 또한 스포츠는 인간 욕망의 해소, 불안을 해결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고 통합을 뒷받침한다.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EU의 기대

따라서 EU가 정신적 유산 중 하나로 지목하는 고대 그리스라는 유산은 일단 민주주의이지만, 그 민주주의는 스포츠와 같이 와야 한다. 정치와 스포츠는 높은 차원에서 하나를 이루기 때문이다. EU의 스포츠 정책은 이러한 스포츠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 EU 스포츠 정책의 기준이 되어온 2007년 백서(White Paper on Sport)에서 EU는 스포츠를 좋은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것은 앞서 말한 관점에서 보면 고대 그리스 세계의 제대로 된 부활이다. 정치적 불안을 일정 부분 해결하면서 통합을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는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스포츠가 종교 등과 더불어 오래된 문화 중 하나라는 점과 최근 EU가 문화를 사회

통합의 견인차로 재조명하고 그것의 정치·경제적 파급 효과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을 이어서 생각해보면 스포츠에 거는 EU의 기대를 가늠할 수 있다.

EU 스포츠 정책의 이면

EU는 회원국 간의 경계를 줄여 통합을 이루어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한편, FIFA는 국가 정체성을 기반으로 벌이는 스포츠 행사의 주축이다. 따라서 EU는 스포츠 분야에서 FIFA와 맞설 수밖에 없다. 이 양자의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유럽 축구 클럽의 쿼터제 문제다. FIFA는 국가 간 선수 이동을 제한하는 선수 구성의 쿼터제(외국인 선수 수에 대한 제한)를 지지하는 반면, EU는 선수를 노동자의 하나로 보아 노동자의 이동 자유라는 원칙 속에서 접근해 쿼터제를 폐지했다. 결과적으로 EU는 스포츠가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와 같이 문화적 예외로 다루지 않고, 스포츠 산업의 틀 속에서 시장 논리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스포츠 문화를 머니게임(천문학적 이적료와 연봉에 따른 스타 선수들의 이적에 좌우되는 경기 승패)으로 전락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리스본조약 內 스포츠 정책의 내용과 의미

최근 리스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EU의 스포츠 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리스본조약이라는 전환점 이전에는 EU에 독립적 스포츠 정책이 없었다. 단적으로 말해 스포츠 분야의 고유한 프로그램과 예산이 없었다. 그러나 리스본조약을 통해 그 부재가 메워졌다.

그렇다고 리스본조약이 발효되기 전 EU가 스포츠를 도외시했던 것은 아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스포츠의 단계적 개혁 프로그램(Rolling Agenda for Sport)'에 대한 회원국 장관들의 비공식적 논의가 있어 왔고, EU집행위원회가 스포츠 백서(2007)를 발간했다. 백서는 53개의 '피에르 쿠베르탱 실행 계획'(Action Plan)을 담고 있는데, 최근까지 EU 스포츠 정책의 근간 역할을 해왔다.

2007년 백서는 2004년 시행된 '스포츠의 단계적 개혁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을 공식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논의 대상은 스포츠와 건강, 스포츠와 교육, 스포츠와 경제,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 도핑, 자원봉사 등이다. 스포츠는 건강, 교육, 경제, 사회라는 틀 속의 논의 대상이지 독립적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성인 1일 추천 활동량(스포츠 포함 Physical Activity)이 30분 이상임을 지적하면서, 회원국과 함께 2008년 말까지 건강을 위해 신체 활동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식이다. 도핑과 같은 스포츠 자체의 문제에서도 EU는 독립 프로그램의 설치가 아닌 인터폴이나 세계반도핑국(World Anti-Doping Agency) 등 기존 제도와의 연결망을 통한 통제를 택하였다.

리스본조약은 이상과 같이 독립성이 없던 스포츠 분야에 고유 프로그램 구성권과 예산이라는 법적 토대를 줌으로써 스포츠의 지위를 격상시켜 주었다. 또한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회원국의 스포츠 관련 장관들이 이사회(Council)의 틀 속에서 스포츠에 대한 공식 모임을 갖게 되었고, 스포츠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Michal Krejza(집행위원회 스포츠 분야 팀장)를 중심으로 '유럽스포츠프로그램'의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회원국과 리스본조약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유럽스포츠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조사를 벌이는 한편,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Krejza에 따르면 초안은 다음 사항들을 감안해 작성될 것이다. 첫째, 페어플레이, 반도핑, 반인종차별,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유럽적 가치에 대한 기여. 둘째, 성차별, 장애인 차별 금지, 스포츠 기관 간 협력 여부를 통한 스포츠의 사회적, 교육적 기능 강화. 셋째, 스포츠클럽 허가 등의 법적 문제, 스포츠 선수나 전문가의 역내 이동 문제 등과 관련한 스포츠 관련 지식과 혁신 사례 교환, 대화를 통한 교류, 거버넌스의 증진 여부. 넷째, 신체 활동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추천. 다

¹ 이 글은 『한국경제신문』, 2010년 3월 13일(토)자 35면에 "스포츠, 시장과 문화 사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칼럼을 수정·보완한 것임.





첫째, 스포츠 분야의 국제기구, 유럽 외 국가들과의 협력.

EU집행위원회 스포츠 분야 팀은 리스본조약을 토대로 진행 중인 유럽스포츠프로그램에서도 2007년의 백서가 기준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리스본조약의 의의는 백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서가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예를 들어 스포츠에서의 지적 재산권)을 재조명하여 백서를 보완하는 데에 있다. ★

임재호 연세대 불문과 교수

유로화 도입 10년은 성공적으로 평가되나 만병통치약은 아님

Eurozone faces a challenge of regional imbalance after successful first decade

The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published a working paper "The Euro after its first decade: Weathering the financial storm and enlarging the Euro area" in March, 2010. This paper analyses the role of European Monetary Union and the benefits it brought to its members in its first decade. It highlights that member countries benefited from the shield that the monetary union provided during the crisis and also that EMU has accelerated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Also, it shows that EMU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macroeconomic stability, trade promotion and financial integration in the Eurozone. Member states need better coordination in their policy making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imbalances and to accelerate their structural reforms.

아시아개발은행(ADBI: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은 2010년 3월 <유로화 도입 10년: 유로지역의 금융위기 극복과 확장을 도모>라는 보고서를 통해 유로화 도입 이후 10년 동안 유로화의 역할 및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유로지역은 1999년 1월 1일 11개 EU 회원국¹을 시작으로 2001~2009년까지 꾸준히 확장되었다. 그 결과 유로화는 현재 16개 회원국의 3억 2,000만 이상 유럽 시민이 사용하는 단일 통화가 되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유럽경제통화공동체(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가 회원국의 번영과 유럽 통합을 촉진시킨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높이 사 유로화의 도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EMU가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거시경제 안정과 무역 증진, 금융통합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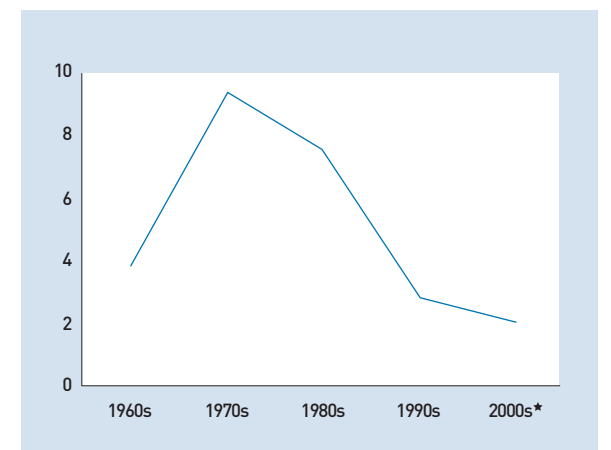
유로화 탄생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유로화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유럽 각국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조화로운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유로화는 모두의 우려

를 딛고 미국 달러화에 이어 영향력 2위의 기축통화 역할을 성공적으로 담당해오고 있다. EMU로 인해 형성된 가격 안정성과 낮은 차입비용은 유로지역 거시경제에 안정성을 가져다주었다. EU집행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유로지역의 물가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제하에 평균 2% 안팎의 저점에 머물고 있었다. 또한 금리도 낮은 수준으로 점차 안정되었다.

유로화는 유럽 단일시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복지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치열한 경쟁과 풍부한 시장 유동성, 투명성, 규모의 경제와 규범의 경제를 통해 통

★ 유로지역의 물가

(단위: %, 10년 평균)



주: ★: EMU 3단계 시작 이래 기간으로 나머지 2년은 추정치
자료: EU집행위원회

¹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후 2001년 그리스, 2007년 슬로베니아, 2008년 키프로스, 2009년 슬로바키아가 유로지역에 가입.



화 및 자본 시장의 통합도 더욱 증진되었다. 더불어 유로화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효율적인 자본 분배, 자유화 및 기술 혁신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 주요 거시경제 지표

항목	단위	유로지역		덴마크, 스웨덴, 영국		미국	
		1989 ~1998	1999 ~2008	1989 ~1998	1999 ~2008	1989 ~1998	2008 ~2008
실질 GDP	변화율, %	2.2	2.1	2	2.7	3	2.6
1인당 실질 GDP	변화율, %	1.9	1.6	1.7	2.2	1.8	1.6
1인당 실질 GDP	지수, 미국=100	73	72	74	76	100	100
고용율	변화율, %	0.6	1.3	0.1	0.9	1.5	1
노동 생산성	변화율, %	1.9	0.8	1.9	1.8	1.5	1.6
실업률	노동인구 대비 %	9.3	8.3	7.9	5.2	5.8	5
물가	%	3.3	2.2	3.4	1.7	3.3	2.8
재정수지	GDP 대비 %	-4.3	-1.7	-3.6	-0.9	-3.3	-2.5
공공부채	GDP 대비 %	68.6	68.6	48.7	43	67.8	60.7
장기이자율	%	8.1	4.4	8.6	4.9	7.1	4.8
실질장기이자율	%	4.7	2.4	4.2	3.3	4.3	2.4

자료: EU집행위원회: OECD

한편,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EMU 회원국 간 성장, 인플레이션, 경쟁력, 경상수지 등의 불균형도 증가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이러한 불균형이 더욱 가시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는 유로화를 더욱 매력적인 화폐로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 유로화의 사용으로 회원국들은 리스크를 분산하고 억제된 환율 변동성 하에 더욱 탄력적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동안 유로화가 오히려 위기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위기 이후 덴마크, 헝가리 등 많은 국가들이

EMU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유로화 또는 EMU가 없었더라면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그렇다면 향후 EMU의 미래는 어떠할까? 여전히 유로화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한 가지는 유로화 도입 국가의 확산, 즉 유로지역의 확대이다. 리스본조약의 목표와 유로지역의 확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리스본조약은 유로지역 통합의 확대와 심화를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통합의 확대는 유로지역 확대를 통한 유로화의 위상 제고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EMU의 회원국 간 운영 및 조율을 위한 효율적 정책 수립과 구조적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Regling, K., et al. (2010). The Euro After Its First Decade: Weathering the Financial Storm and Enlarging the Euro Area, ADB Institute.) ★

이지혜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제1회 비즈니스 심포지엄 The 1st Business Symposium

The Yonsei-SERI EU Centre held its first Business Symposium on the 23rd of February under the title "'On the road to Korea-EU Business Cooperation in Green Industry'". This symposium was sponsor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EUCCK) and it was held at the Lotte Hotel in So-Gong Dong, Seoul. It provided an opportunity to share the views and opinions of business leaders and government officials on current environment-related issues and it involved various sessions with an aim of opening up discussions on topic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U 's future green industry and market, the role of judici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supporting the green industry, and environment-related technologies. We were pleased to have Ambassador Brian Mcdonald and Deputy Minister Lee Hye Mi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MOFAT) as our speakers to give welcoming remarks and congratulatory speech. The symposium was divided into three sessions with insightful presentations given by Mr. Pedro Santos(EU Delegation), Dr. Do Gun-Woo(SERI), Mr. Lee Dal-Jae(TUV SUD), Professor Kim Jung-In(Chung-Ang University), Mr. Peter Underwood(IRC), Mr. Jean Philippe Baudrey(EUCCK), and Mr. Tom Duke(EUCCK). They were followed by discussions and a Q&A session led by Professor Kim Zuk-Weon of KonKuk University.

지난 2월 23일 '녹색성장 시대의 도래와 한-EU 그린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회 비즈니스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연세-SERI EU센터가 주최하고 EU집행위원회와 EUCCK의 공동 후원으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EU의 녹색산업 현황과 육성정책, 한국과 EU 기업들의 녹색경영 사례, 녹색산업에서의 양측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양측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브라이언 맥도널드(Brian Mcdonald) 주한 EU 대표부 대사와 이혜민 외교통상부 교섭대표가 참석해 환영사와 축사를 하였고, EU 대표부의 페드로 산토스(Pedro Santos) 무역참사관, 도건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달재 TUV SUD 부사장, 중앙대학교의 김정인 교수, IRC의 피터 언더우드(Peter Underwood) 대표, EUCCK의 장 필립 보드레(Jean Philippe Baudrey) 이사과 탐 듀크(Tom Duke) IP 센터센터장의 수준 높은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건국대학교 김주권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Lisbon Treaty

The Yonsei-SERI EU centre and Yonsei University's institute in the Department of Law held an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23rd of February. Participants, including Prof. Hong Sung-Pil of Yonsei University, Prof. Olaf Leisse of Friedrich-Schiller University, Prof. Kim Yong-Ho of Inha University, Mr. Gergely Polner(DG Communic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Prof. Lee Moo-Sung of Myungji University, and Prof. Kim Min-Seo of Kyungbook University, had an active discussion on topics related to the Lisbon Treaty

2월 23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국제회의실에서 연세-SERI EU센터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최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는 'The Lisbon Treaty'로 홍성필 연세대학교 교수, 독일의 Olaf Leisse 프리드리히 실러 대학 교수,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용호 인하대학교 교수, Gergely Polner(European Parliament, DG Communication, Belgium) 박사, 이무성 명지대학교 교수, 김민서 경북대학교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기후변화 국제세미나

EU-Korea Seminar on Priorities for a Post 2012 Agreement

An EU-Korea seminar on climate change was held under the title "Setting up Post-Kyoto Protocol regime" on the 4th of March at the Plaza hotel in Seoul. Countries failed to agree on the adoption of a new legally-binding treaty at last year's UN Copenhagen climate change conference. It is believed that this year is going to be crucial for setting up the agenda in order to progress in the agreement over climate change issues. The Delegation of the EU, the British Embassy and Yonsei-SERI EU Centre therefore decided to host the EU-Korea seminar on "Priorities for a Post 2012 Agreement" as to provide a venue for discussions between professionals and various stakeholders. Ambassador Brian Mcdonald of the EU, Ambassador Martin Uden of the UK, and Deputy Minister Ahn Ho-Young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MOFAT) gave opening, welcoming and congratulatory remarks. They were followed by various sessions covering "Korea and EU's priorities for a Post 2012 Agreement", "Business view on a Post 2010 Agreement and its preparation", and "The task and roles of NGOs after Copenhagen".

지난 3월 4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포스트 교토 협정'을 위한 '어젠다 설정'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었으나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10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어젠다 설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연세-SERI EU센터는 EU 대표부, 영국대사관과 공동 주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브라이언 맥도널드(Brian Mcdonald) 주한 EU 대표부 대사, 마틴 우든(Martin Uden) 주한 영국 대사관 대사, 외교통상부 안호영 외교차관 등이 세미나에서 환영사 및 축사를 했습니다. 또한 포스트 2012년에 대한 한국과 EU의 우선과제, 기업의 시각 및 NGO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제10회 특별강연: 유럽 장학 설명회

The 10th EU Special Lecture: Introduction to European Scholarships

Yonsei University invited William Aitchison(Erasmus Mundus programme manager, DG Education and Culture, European Commission) to give a special lecture on "Erasmus Mundus: European Scholarships: opportunities available to Korean students under the Erasmus Mundus scholarship scheme".

연세대학교는 지난 2010년 3월 25일 백양관에서 "Erasmus Mundus: European Scholarships" 'opportunities available to Korean students under the Erasmus Mundus scholarship scheme' 라는 주제로 William Aitchison(Erasmus Mundus programme manager, DG Education and Culture, European Commission)을 모시고 제10회 EU 특별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제6회 EU Core Circle Society 세미나

The 6th EU Core Circle Society Seminar

The Yonsei-SERI EU centre hosted its 6th EU Core Circle Society Seminar under the title "Recent developments in the European Union's external rel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Dr. Lee Sang-Kew who was with the Korean Embassy in Brussels between 2006 and 2009 and now a senior researcher at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was invited as the seminar leader. Dr. Lee gave a thorough presentation based on his experience and theoretical background on EU's external relations. Participants discussed on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EU.

지난 3월 26일 연세-SERI EU센터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최근 EU의 대외관계 동향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로 제6회 EU Core Circle Society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06년부터 주 벨기에-EU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한-EU FTA의 숨은 주역으로 꼽히는 이상규 교수부장(現외교안보연구원)을 모시고 그동안 유럽에서 접한 생생한 경험이 더해진 EU의 대외정책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또한 한-EU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